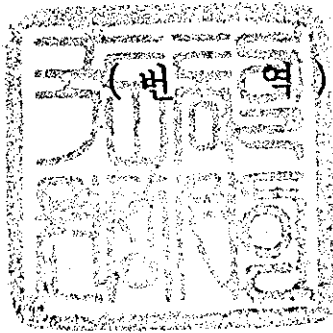


한 국 분 단 과 통 일

KOREAN PARTITION AND UNIFICATION



이 정 식 저

1969. 6

한국분단과 통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쟁전의 현상 -다소 변경이 가해졌지만- 이 한반도에서 다시 회복되었다. 이로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값비싼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는 그의 선거공약을 완수한 것이다.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이 결렬된 후 세계지도자들은 이의없이 한국문제를 논의의 것으로 돌려 버렸다. 그후 독일통일문제 (최근에는 베트남문제)는 국제회의석상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풀기 어려운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의 어느 강대국도 접근하기를 꺼려했다. 유엔총회는 대한기정목표를 강조하는 결의문을 해마다 통과시켰지만 이는 실상 ^년 (년)례행사^다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계지도자들의 한국문제에 관한 -허심탄회한듯한- 견해도 남북한 양지역민으로 부터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받을 수도 없다. 한국통일문제란 비록 그 열도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할지라도 한국민들에게 절박한 문제다.

여하한 문제도 통일문제 이상으로 한국민의 정열과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깊은 감정적 집착의 이면에 뿌리박은 원인들을 (7)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7세기 신라왕조가 반도를 통일한 이래 한국은 정치적, 문화적 및 경제적으로 통일된 단위였다. 한국은 1895년까지 중국의 종주권 아래 있었고 그후 1945년까지 일제의 통치아래 있었지만 나라의 통합은 결코 깨트

릴 수 없었다. 한국민은 40년의 일제치하 기간에 보다 강한 국민적 연대성과 동일감을 갖게 되었다. 족벌주의와 지역주의가 한국민의 정치행위에서 뚜렷한 특성을 나타냈으나 민족주의는 이들 분열의 요소를 훨씬 능가했다.

한국민족주의는 한국분단이 현실화한 해방 직후 몇년동안에 가장 강력할 수 밖에 없었다.

1945년에는 한국민은 환희와 희망의 절정에 있었다. 그들은 연합국이 승리하자 ²¹한결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의기양양하였다.

일본의 항복은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들을 제거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일제의 40년통치 동안에 한국민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주의가 바로 모든 불행, 사악 그리고 파오의 원천이라고 믿어 왔다. 일제의 강압과 착취가 제거됨으로서 한국민은 비극의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해방 직후 수개월간에 한국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의 조기독립을 의심치 않았고 한국 「인테리」들은 그들의 능력이 근대적 국가건설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4대강국 신탁통치를 규정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협정에 대해 한국의 여러 사회단체는 격렬히 반대하였고 38°선을 영구분할선으로 용납하는데 대해서도 한국민은 충격적으로 저항하였다.

38°분할선의 자의적 획정이 남북한의 경제구조를 기형화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에는 중공업과 전력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에는 경공업과 농업자원이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남한은 분단아래 전력의 부족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

이 경제적 불균형이 한국통일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끌게 되었으나 한국분단에 대한 주된 반대는 대부분이 정치적인 것이었다.

한국통일을 논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점은 한국분단이 2차 세계대전시 연합국인 미소 2대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국민은 이 결정에 하등의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분단의 결정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일반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그 윤곽은 확실하다.

미국정부의 공식설명에 의하면 38°비무장선이란 한국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에 있어서 미소간의 책임분담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즉 공식표현을 빌리면 "순수한 임시 군사적 결정 (Purely ad hoc Military Decision)" 이라는 것이다. 역시 소련도 최근 한국정세의 유착상태의 원인에 대한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와같은 해석에 반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극동 또는 그의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으로 보아 여상의 해명은 아주 보잘것 없고 부적당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2일 소련군 선발대의 응기, 라진, 항구진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소련군은 확실히 전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자세에 처해 있었다. 가장 가까이 접근한 미국선발대는 근 600마일 떨어져 있는 유구 계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할수만 있다면 소련군을 한반도 남쪽 첨단에 까지 진주시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싶었던 「스타린」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

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을까?

38°분단선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오히려 정치적 힘의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워싱턴 당국은 8월중순 한국분할의 결정에 즈음하여 동구에서는 이미 소련의 팽창주의 (Expansionism) 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워싱턴 정책수립자들의 심중에는 「비록 일시적이거나 소련에게 허용된 여하한 영토라도 소련으로 부터 탈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고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방성 관리들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역사적 이해관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상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한국분단결정이란 남한 반공주의자들에겐 어떤 면에서 다행한 일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한 분단결정이 없었다면 전한반도가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은 양단이야말로 한국민의 소망과 요구와 무관한 국제정치역학의 산물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다. 이 점이야말로 "중립한국" (A Neutralized Korea) 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의 분개와 혐오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현실로 되었으며 잇따른 값비싼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한국은 아직 양단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남북한 사이의 심연은 점점 넓어지며 깊어지고 있다.

통일전망과 방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양단된 한국에서 일어난 변천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남한은 지난 20년동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변천을 겪어왔지만 기본적인 성격의 뚜렷한 변화 (북한과 비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는 찾아 볼 수 없다. 남한국민은 대체로 권위주의적 정체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이념에 깊이 젖어 있으며, 그리고 서구에서 알려진 내용의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의 열망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남한경제는 비록 변화가 일어나긴 했으나 그 변화가 한정된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업생산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남한은 아직 농업사회이다. 공업의 발전은 처음 지적했듯이 전력, 원료 그리고 숙련된 인적자원의 부족때문에 크게 장애를 받고 있다.

대외무역면의 국제수지역조는 역시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공산당 (조선노동당) 은 확고한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1962년 보고에 의하면 총인구 10,780,000 가운데 130,000명의 당원을 가지고) 북한을 효율적으로 일원적 전체사회로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기본적인 성격의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 농업은 철저하게 집단화되었다. 농민들은 평균적으로 300가구와 1,200에이크 (acres) 로 구성된 3,800개의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operatives) 으로 조직되었다. 농민들은 이제

작업반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그들 일상생활은 당의 여러 층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상공업분야에서도 똑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1946년 공업생산력의 27.6%가 사기업부문 (Private Sector)에 있었는데 1958년까지 모든 생산은 사회주의체제 (Social Sector)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

상업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1946년에는 상업의 96.5%가 사기업수중에 있었으며 1958년에 모든 상업활동이 국유화 되었다. 요약하면 북한의 급격한 사회주의화는 한국의 두지역간의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차이를 극단화해가고 있다.

북한공산당의 급진적 경향은 1953년이래 전후시기에 더욱 명백해졌다. 현재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두지역을 결합시킬 공통요소를 찾아낸다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된다.

그 결과는 한국의 장래를 위하여서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III

여러가지 요인이 국민적 단합을 위한 순수민족감정을 지속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정치적환경면에서의 계속되는 격차, 장기적인 「코뮤니케이션」의 부재, 그리고 상대방 지역상항에 대한 일방지역 주민의 완전한 무지등이 국민적 동일감과 역행하여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한국민의 전통적으로 높은 민족의식과 인위적인 한반도분단의 영구화를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결의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양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분단을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욱기 남북한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모두 현실적인 것이 아니지만 양정권은 통일문제를 사정하지 않고 있다. 양지역의 교육정책은 역시 민족적 동일성의 유지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로 열거될 수 있다.

① 한국전쟁전시기의 북한의 교육정책은 국제공산주의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소련의 업적과 방식을 모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립되긴 했으나 전후에는 북한정권이 민족적 동일성과 민족의 유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민족사와 문화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의 민족영웅과 선각자들이 찬양되고 있다.

남한위정자는 미제국주의의 주구로 비난받고 있지만 민족의 단합은 역시 주장되어 지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도 민족적인 경향이 교육정책에서 결코 도외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 공산지도층은 소련의 괴뢰로 낙인 찍혔지만, 민족의 단합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다.

정확한 「데이터」의 부족때문에 기껏해야 가정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다.

필자는 사회정치상황의 계속적 격차와 「코뮤니케이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동일감은 양지역의 국민사이에 여전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한국민족주의의 탄력성이 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적동일감의 존재는 명백히 한국재통일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통일문제는 「이데올로기」차이와 국제정치의 역학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면 통일한국에 대한 여하한 전망이 존재하고 있는가?

일방에 의한 전격적인 군사정복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은 명백하다.

정복에 의한 통일방식은 이승만정부에 의해 널리 주장된 정책이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 남침함으로써 이승만정부의 기선을 제하였으며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전쟁시초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전한반도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는데 성공할 뻔 했으나 1950년 이래 군사적상황은 변했다. 현재로는 어느 한쪽의 기습공격으로 군사적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쌍방이 주요강대국과 군사적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국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북한은 중·

소 북쪽간의 불안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련과 중공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미국이 공산침략에 대비하여 2개사단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IV

그러면 협상을 통한 통일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 문제의 해답은 이미 제안된 두가지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1) 북한의 "평화적통일" 방안

(2) 한국중립화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 문제를 크게 선전하고 있으며, 남한국민의 일부에서도 교섭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요구가 대두하고 있다. 기실 「평화적통일」의 구호는 전후 북한에서 급진적인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정당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지도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당의 궁극사명으로 삼았다.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은 3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소위 북한의 민주적 기지의 강화,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그리고 남한대중을 공산주의자의 「해계모니」아래 조직화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기념일을 맞이하여 김일성이가 한 연설문을 보면:

『오직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세력이 보다 강화되고 남한의 애국적 전역량이 확고하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추종자들에 대항하는 최종적 투쟁을 감행할 때 우리는 남한으로 부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북한에 민주적 혁명적 기지를 공고화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었다. 남한의 「학생의거」 해인 1960년도 부터 그들은 통일방안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 활발히 움직이었다.

남한의 혼란한 틈을 타서 그들은 많은 것을 획득하였음이 분명하다.

주지된 바와 같이, 학생의거후 남한에는 사회정치적인 일대 혼란이 뒤따랐다.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정치경제적 좌절을 통일문제와 직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렸다. 「양단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며 통일을 제외한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라는 남한국민의 뿌리깊은 신조를 부채질 하는 선전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은 언제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오직 통일에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선문제는 조선인 자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테마」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

제조건으로서 남한으로 부터 미군철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제안하였고 동시에 남한이 체결한 모든 방위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공산주의정권은 남북한의 현저한 의견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묘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일성은 반미투쟁을 호소하는 1960년 8월 14일의 연설에서, 통일을 향한 단계로서의 소위 「연방제」를 제안했다.

두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국민위원회 (Supreme National Committee) 는 연방 (Confederation) 의 수뇌부가 되어 통합된 경제문화의 발전을 운영할 것이라 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이 제도의 채택이 두개의 한국 사이의 접촉과 교섭을 촉진시키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킬 것이라 했다.

이해가 이루어지고 상호 불신이 해소될 때 신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괴수상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합리적 성격을 전시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김일성은 남한당국이 연방에 참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파탄된 남한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 무역을 증진하고 「상공업대표의 교환」과 같은 제한된 접촉으로 족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다른 공산주의자들은 경제관계를 재개함으로써 얻어질 커다란 이득을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한의 농업은 북한의 기계설비와 화학공업의 도움으로써 파탄된 물질적 기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급격히 그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원자재, 연료, 전력공급 및 장비로써 파산되고 황폐화된 남한국민경제는 다시 재생될 것이며 더 많은 새로운 공장이 세워질 것이며 수백만의 실업자가 고용될 것이다』

그후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에 낙토 (Millenium)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낙토를 향한 첫단계는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사이의 교섭을 더 놓는 일」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제안이 얼핏 보아 그 의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반대이다. 대미투쟁에 관한 공산주의자들의 호소는 평화교섭을 위한 제안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전쟁선언이나 다름 없다.

기실 통일을 위한 교섭제안속에 북한이 반미감정을 주입시킨 것은 역대 남한정부로 하여금 교섭문제를 두고 필요이상으로 경화된 태도를 취하게끔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이유로 한정된 교섭이나 마뎃자는 자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교섭을 지지하는 자들이 남한에서 요시찰인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은 교섭을 향한 실제적인 진전보다도 오히려 선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면,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반미적 태도의 표시로 인정, 환영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대한민국정부를 난처한 처지에 몰아 넣을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정부가 교섭을 위한 여하한 제안도 받아드리는 것을 거절한다면 공산주의자는 이를 남한정부가 미제의 도구라는 증거로 당장 제시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재침략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용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들은 남한이 여러가지 제기된 교섭의 한 조건으로서 방어적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경계는

모두 잘 돼가며 남한의 경제적인 제문제를 전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주민을 절체, 흑사, 조직화의 극단적인 상태로 예측시키는 따위 일이 불필요할 것이다.

양단된 두 지역의 보완경계의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남북한 두 지역의 비교가 하늘과 땅의 그것이다 라는 주장을 실증할 수 없다. 남한정부에 대한 태도를 끊임없이 변경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네들의 불성실성에는 조그마한 의심도 남기려 하지 않고 있다.

남한지도자들이 어떤 문서에서는 남한인민의 가장 미워할만한 반역자라고 표현했다가 또 다른 문서에서는 예절 바른 경어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책략은 어떠한 친교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통털어서 말하면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교섭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남한의 이론 바 「혁명」과 「해방」을 운운할 때도 진지한 태도가 아님은 뚜렷하다.

VI

1960년 학생의거후 남한에서의 중대한 변화는 "북한과의 직접 교섭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이라는 요구가 점고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남한국민은 통일문제를 진실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을

무조건 거절하고 통일의 논의를 억압하는 이승만 정부의 견식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61년 5월의 「쿠메타」 바로 직전 일부 대학생들은 북한의 그들 상대를 만나기 위해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위협하였다.

1961년초 남한국민의 대표적 인물 사이에 행하여진 조사에 의하면 그들중 16%가 협상을 찬성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의 과거정책이 공산주의들에게 선전자료를 제공하였고 남한의 입장을 수동적 위치에 놓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정부는 UN감시하 남북총선거를 지지하는 외에도 1949년 이전수준의 경제관계재개, 우편 및 문화적 기술적 자료의 교환과 같은 과도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경제문제와 정치를 혼합함으로써 논쟁 (Issues) 과 문제 (Problems) 를 뒤죽박죽했을 경우 (예를 들어 남한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것 등) 남한정부는 문화적 경제적 문제와 정치의 분리를 들어서 상호 유익성이 있는 한정된 교류 (Limited Exchanges) 를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이니셔티브」를 잠계하고 동시에 북한제안의 선전적 내용을 폭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불론 경제와 그외의 교류가 정치적 연관이 없이 일어날 수 없고 또 경제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해질 수 있다.

제한교류 (Limited Exchanges) 의 반대자는 남한경제를 사실상 마비시킨 1947년 소련집령당국에 의한 남한에의 전력공급중지를

재빨리 지적할 것이다.

성실과 선의를 가정으로 한 북한의 전력공급을 전제로 하여 남한경제를 계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남한농업을 북한의 화학비료공업에 의존시켜야 할 것인가? 남한경공업을 북한중공업에 연관시켜야 할 것인가?

물론 비료, 공업생산물같은 상품의 거래는 쉽게 행해질 수 있으며 전력의 경우와 같은 불성실의 작위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무역과 교류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다. 통일논의에 관한 보다 중대한 문제는 "제한접촉을 개시함으로써 통일의 대명제에 여하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이 통일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명백히 부정적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상호이해와 평화통일의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알맹이가 없다. 오늘날 한국통일의 장애는 이해부재가 아니라 두 경제 및 사회적 기본적 대상의 차이이다.

상이한 정체에 의해 대표되는 "두개 한국"의 「이태오르기」와 열망은 기본적으로 상충하고 있으며 각 정권이 달성코자 하는 목표란 상대방의 정치사회체제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두 사회의 지도층과 제식「엘리테」층의 의견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상호이해를 고양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의 기회가 증진될 수는 있으나 통일전망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것 같지는 않다.

북괴수상이 「두개 한국」의 공존에 대한 관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인 것이다.

1955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조선이 북반부와 남반부로 분할된 상태로 공존해야, 한다는 관념은 대단히 위험하다. 즉 이것은 우리의 통일의 노력을 파괴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소지자들은 남조선혁명의 책임을 남조선인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북조선인민이 져야 할 남조선해방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조국의 분단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영구화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몇몇 한국인과 외국인은 똑같이 한국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중립화에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 방안이 ——북괴와 한국정부에 의해 거부되어 왔지마는—— 한국민의 일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이지적인 「어필」을 주고 있는것 같다.

중립주의자의 목표란 미국, 소련 및 중공의 상충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난 통일한국의 건설에 있다.

이러한 중립주의자들의 입장은 "한국중립화위원회" (Committee for the Neutralization) 의장이며 "한국「리뷰」" (중립주의포방의 일본잡지) 편집장인 김삼규씨에 의해서 가장 잘 대변되고 있다.

김삼규씨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두 정권은 세계의 대립된 열강들의 산물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후견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 두 정권은 2차대전 직후에는 대립된 열강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나 국제긴장이 완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여하한 목적에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 정권은 해산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총선거를 통해서 새 헌법을 채택하는 새로운 국회가 선출되어야 한다. 두 정권이 해체되고 새 정부가 수립되는 과도기에는 중립주의 국가 (Neutralist Nations) 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한국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판타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기존군대와 경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와 경찰을 창설해야 한다. 그 다음 통일한국의 중립이 국제협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국군사기지도 한국 내에 설치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김씨의 주장속에는 미국과 소련이 반도를 분할함으로써 한국에 중대한 파오를 저질렀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도리켜 놓는 것이 강대국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김씨는 시침을 한국이 해방된 1945년으로 되돌려 놓음은 물론 새로운 비동맹한국정부 (Non-Aligned Korean Government) 수립을 감독하기 위한 잠정적 신탁기구로서의 중립주의 국가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해방초기의 많은 한국지도자들, 특히 1948. 5. 남한의 의회총선거에 참여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당시 다수 남한국민은 총선이 한국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이유때문에 총선을 기권하였다. 만일 두개의 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많은 한국인들은 1948년에 중립주의자들이 주장한 제안을 환영했을 것은 분명하다.

또 그들이 이러한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마 1945년에 그들의 자존심을 굽히고 1945년 12월의 「모스크」 결정, 즉 한국신탁통치를 받아 드렸을 것이다.

차라리 신탁통치가 오히려 1945년 이래의 한국민의 역운이 되
고만 비참한 경험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후약방문 (Hindright) 격에 지나지 않는다.

Ⅶ

1964년의 정세는 1945년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며 시계침은 되돌려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강대국이 화해에 도달하여 한국중립주의들의 제안방책에 따라 한국을 통일할 것을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남북한 전국민이 중립주의자들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가정해 보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이루어 놓은 모든 혁명적 변혁을 철폐하고 그들의 지배를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이태리 발란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것 처럼 의회를

통한 공산화노선을 순수하게 받아드린다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계속 온건정책을 거절하고 해방 혁명투쟁을 주장하여 왔다.

김삼규씨가 주장한대로 혹자는 북한이 소련에 의해 제기되는 중립화 결정에 관해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북한지도자들은 결국 소련의 피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에 대항하는 북한지도자들의 최근 발언은 소련의 북한지배를 의심케 하고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역사는 그들의 편이니 따라서 그들은 어떤 강대국 또는 남한과도 실질적인 면에서 타협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말한 두가지 가정가운데 첫번째의 비현실적 성격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논할 필요가 없겠다.

여상의 분석으로 판단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통일의 전망에 대해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두개의 정부는 그들의 지배영역을 자급자족하려는 목표 ——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분단을 경화시키는 경향을 지닌 —— 를 향해서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진적 변혁은 남북한의 간격을 더욱 넓게 더욱 깊게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민이 열망하고 선택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란 제한된 교류와 무역을 통하여 한국의 두 지역간의 접촉로를 뚫는 일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통일되었던 남북한 두 지역의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소원작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장래에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기적이 올지도 모른다.

